

한라시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맞게 됐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코로나를 이겨내고,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다짐과 덕담들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듯하다. 더불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한국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높다.

제주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회와 지역의 주요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변화의 폭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최대 이슈였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해 초 사회

도민의 삶을 위한 제주사회의 혁신을 기대한다

적 합의에 따라 진행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례로 사실상 백지화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거부한 채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이다.

지난해 말 오랜 숙원이었던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희생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제주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민간인 학살 책임 규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뒤따른다. 개발중심의 정책도 변화의 과제 중에 하나다. 관광산업의 팽창·확대 정책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된 각종 관광개발사업은 환경 파괴에 따른 난개발 논란과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불러왔다. 도는 청정 제주 송악산인, 환경보전 중심의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

는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작업도 도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제주특별법은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같은 존재이다. 그만큼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특별법은 30년 전 국회 날치기 통과로 제정된 제주개발특별법을 근간으로 개발촉진, 규제 완화를 기본 성격으로 한다.

제주특별법의 목적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있다.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정의하며, 이를 제주도가 지향하는 비전으로 삼는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각종 개발의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조세와 부담금 등 세금

이 면제·감면된다. 공공용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비축했다가 투자자가 나타나면 헐값에 토지를 공급하기도 한다. 제주도민은 없고, 투자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우선이다.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개발중심의 행정으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공동체 파괴와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 비전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여러 도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지역의 민심이다.

따라서 올해 제주는 지역사회가 혁신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지역현안의 해결에서부터 도민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의 전면개정까지 제주사회의 대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도민의 삶과 미래는 오래 지속돼야 한다.

사설

민군복합항인데 입출항 통제하면 되나

새삼 ‘민군복합항관광미항’이 궁금해진다.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은 ‘해군기지’의 다른 이름이다. 물론 정부나 해군의 설명은 다르다.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닌 복합항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아름다운 항구를 해군은 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지 납득이 안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해군본부에 제주도에 민군복합항관광미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그동안 해군은 민군복합항 크루즈선 접근 부두와 입·출항로 등 방파제 안쪽 전체 수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제주도와 협의해 왔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해군의 방침대로 민군복합항 항내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이면 크루즈선은 입항 7

일 전에 운항 일정을 부대장에게 통지한 뒤 허락을 얻어야 입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민군복합항 항내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군복합항관광미항이 당초 취지를 잃으면 안된다. 정부와 해군의 주장처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가 2013년 국방부·국토해양부와 공동사용 협정도 맺었다. 이 협정에서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곤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레놓고 해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크루즈선도 입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광지 교통 민원 속출, 용납 안된다

택시·렌터카 관련 불편 민원들이 속출, 관광지 제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관광지 고질적 병폐인 바가지요금, 불친절 사례들은 제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들이다. 행정과 관광업계 모두 인식해 온 관광지 병폐가 아직도 만족할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은 현실에 실망감이 앞선다.

택시 불편민원은 2019년 823건, 2020년 428건, 2021년(1~11월) 723건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추이에 따라 감소에서 급증세로 돌아섰다. 내용별로 보면 부당요금 215건, 불친절 173건, 승차거부 110건 등 순이다. 렌터카 불편민원도 작년 1~11월동안 자차보험(면책금) 36건, 수리비 과다 27건, 요금불만 26건, 불공정계약 11건 등 290건에 달했다. 민원이 적은 세대 중심의 관광객에다 스마

트폰 보편화라는 시대·사회적 특성에 따라 늘었다는 평가다.

관광지 제주가 아직도 바가지요금, 불친절 민원을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건 문제다. 행정·관광업계 모두 시대 변화에 맞춘 관광업 활성화 ‘자세’를 못갸했다는 얘기가 다름없다.

행정이 병폐 척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도가 이미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경고·개선명령, 과태료에다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 정도로는 안된다. 상습·악질적인 불편 사례들은 관련자들을 아예 ‘퇴출’하는 방안까지 나와야 한다. 관광지 병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물전 망신 꼴뚜기’로 인식되는 일부 종사자의 전면 퇴출과 ‘일벌백계’로 제재해야 마땅하다.

편집국 25시

제주도교육감 선거



오은지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ojoh@ihalla.com

다음 달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차기 제주교육수장을 뽑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시계가 이달을 기점으로 빠르게 돌아갈 듯 하다.

2007년 첫 주민직선 교육감 당선 이후 세 번의 교육감 선거가 이뤄졌지만 교육감선거는 도지나사의 도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 밖에 머무른다. 정당공천이 없는데다 교육계 종사자가 아니면 후보가 누군지 잘 모르는 낮은 인지도 영향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선거판에서 ‘현역 프리미엄’은 이점이자 선거전략이 되기도 한다.

교육계 일각에선 올해 선거도 예년과 다르지 않은 ‘묻지마 투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인물도, 주목할 만한 교육 이슈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과 대통령 선거도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과 제주 미래교육을 위해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당장 교육행정과 이해 관계가 없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차별화된 공약과 정책 제시는 후보들의 숙제다.

지난 교육감 선거일, 후보 공약집을 들고 어느 후보의 교육 공약과 정책이 나인지 논의하던 부녀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유권자의 무관심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치열한 정책 선거를 기대해본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앞으로 140여 일 남았다.

뉴스-in

구만섭 대행 공무원 선거 중립 신신당부

선거법 위반 사전 차단도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선거 중립을 신신당부해 주무.

구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담당부서에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이어 “선거투표가 진행되는 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등의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달라”고 강조한 후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신규 시책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주문. 고대로그자

“학생의 행동 성찰할 수 있게”

○…올해 지정·운영될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생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필수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이 심사의 기준이 될 예정.

제주도교육청은 5일 특별교육 위탁교육 기관 공모계획을 공고하면서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학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폭력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지, 정서, 행동상의 변화를 이끌어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보호자에게도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

도교육청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가족형 특별교육, 학생생활교육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해 기관을 지정할 계획. 오은지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춘자**(향년 6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1월 6일

남 편 박성철

아 들 박준규

딸 박주영

사 위 양은식

박미영

임성호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계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집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MR'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